

2019년 제4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개최 결과 보고

□ 세미나 개요

- (주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
 - 사회 : 왕호성 연구사(국가기록원)
 - 발표 : 이주광 연구관(국가기록원)
 - 토론 : 양동민 교수(전북대학교), 백영미 과장(한국철도시설공단)
- (일시/장소) '19. 5. 22.(수) 14:00~16:00 / 정부대전청사 2동 중회의실 207호
- (참석) 총 66명
 - (내부) 국가기록원장, 전자기록관리과장, 관련 담당자 및 관심 직원 24명
 - (외부) 토론자, 기록관리 관련 기관 담당자 등 42명
 - ※ 공공기관(12명), 군기관(9명), 중앙행정(7명), 교육청(7명), 대학(2명), 지방(1명), 대학원생(1명), 시스템 관련업체(3명)

□ 추진 성과

- 기관과 학계 연계형 전문가 발표·토론 중심의 '열린 논의의 장' 마련
- 발표 주제와 관련한 시스템 분야 종사자 등 일반인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

□ 주요 논의 내용

- 추진배경 및 경과, 기초분석, 기록관리원칙 및 관리체계, 데이터 이관 및 보존전략 등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 제시
- 기술지원센터 구성의 필요성 및 역할, 웹기록물과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분류기준, 데이터세트의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방향 등

□ 향후 계획

- 제2차 기록관리 정책포럼 개최(나라기록관 4층 대강당) : '19. 6. 7.
 - ※ 「공공기록물법」 시행 20년의 성찰과 과제(기조연설, 주제발표 ①·②)
- 제6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개최(대전기록관 2층 세미나실) : '19. 6. 8.
 - ※ 공공기록물이란 무엇인가? 법적 개념과 성립 요건을 둘러싼 쟁점토론(주제발표 ①·②·③)

○ (양동민 교수) ① 마이그레이션의 경우 문서보존포맷은 dump file 자체 또는 siard 파일이 될 수 있고, 장기보존포맷은 NEO2 또는 향후 개발될 패키징 방식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그에 반해 에물레이션의 경우 포맷정책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에물레이션 방식도 시스템 이미지 라는 파일이 생성되기 때문에 포맷정책에 포함될 수 있을 듯함.

=> (이주광 연구관) 통상적으로 장기보존 포맷, 영구보존 포맷, 표준 포맷 등으로 나누지만 데이터세트 영역에서만큼은 현실적으로 더 많은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더 리프한 스케일로 가고자 함. 다만 에물레이션에 대한 프로세스 정리는 가능하나 상세 스펙 혹은 포맷규격 등은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조이형 전자기록관리과장) 보존정책이 기존의 단일화된 측면에서 유연한 형태로 이 분야에 대한 기술이나 연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방향이나 기술이 전체적으로 총론에 모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② 일반 국민이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공공기관 대표 홈페이지)는 웹기록물이며, 그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DB 안에 축적된 기록 역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이므로 이 기록을 웹기록물 혹은 행정정보데이터세트로 관리 하느냐에 대한 구분 또는 분류 기준은 필요할 것임.

=> (이주광 연구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은 웹기록물, 그 외의 것은 행정정보시스템임. 내부적으로는 별도 시스템으로 옮겨 와서 구축이 된다면 이 자체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로 식별하고, 홈페이지의 경우는 웹기록으로 판단됨.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어렵지만 협의체를 통해서 기록학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근거를 남겨놓는다면 그것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조이형 전자기록관리과장) 행정정보데이터세트는 기관 내에서 운영 하는 것이고, 웹은 홈페이지 상에서 국민과의 연결이 오픈되어 있지만 내부 구조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이므로 특성에 맞게 분석하되 접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될 듯함. 다만 너무 상세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잘 활용,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③ 기술지원센터는 향후 전자기록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판단됨. 구상하고 있는 기술지원센터의 지원 기술 분야, 인력, 조직 등은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 궁금함.

=> (이주광 연구관) 기록원 내부에서도 기술지원센터 설치의 필요하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 조직 구성은 전담 팀장과 등록관리 시스템 전담 운영팀, 현장 시스템 관리운영팀 등 3개 팀 정도가 운영되도록 구상 중임. 다만 행안부 조직, 기재부 예산, 국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간은 여유있게 잡을 필요가 있음.

=> (조이형 전자기록관리과장) 인력 확충이 용이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임. 구성 방향을 당장 제시할 수 없지만 업무에 비례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임. 현재는 2명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3~4년 안에는 300여 개 시스템을 정밀 스테디 해서 가급적 현장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레퍼런스를 만들 계획임.

○ (백영미 과장) ①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유용성, 정보 자원의 가치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직접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제시한 룰에 맞추어 관리하고 있는데, RM단계에서의 기관에 대한 입장이 좀 생략된 감이 있음. 1차적으로 기관 내에서 관리하고 이 부분을 다시 AM 단계로 넘길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함.

=> (이주광 연구관) '07년부터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관리해야 한다고 일을 했지만 그동안은 이론적인 베이스만 제공하고 방법론적인 접근은 못했음. 지금 전체를 완벽하게 관리하겠다고 욕심 부린다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으므로 현재는 초기 단계에서는 러프 하지만 분명히 기록관리 영역으로 끌고 온다는 부분으로 첫 시도를 하고, 그것을 실행해 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완하는 장기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 (조이형 전자기록관리과장) 기록원이 관리방식을 포기했다, 기록관에

자체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주었다는 생각은 오해이고, IT 베이스나 비정형화된 부분에 대한 상황을 초기단계부터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방향성을 빨리 결정하자는 측면에서 현장 밀착형 협업지원체계를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음.

=> (조윤희 (주)한국남동발전) 국가기록원의 적은 인력, 핵심 인원만으로 전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현장 밀착형 협업체계 구상은 현실적으로 무리수가 있고, 인력, 조직, 권한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됨. 개인적으로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기능요건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봄.

②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록관리시스템은 cams 고도화 시 체계적으로 모듈화시켜서 구축하고, 유형이 다른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항목까지 포함해서 하나로 구성하는 것이 비용 절감이나 관리 차원에서 더 유용할 듯함. 청와대 RMS팀에서도 범용 ISP를 만들고 있는데 기록관리시스템 측면에서 기술 개발하는 구조로 나아가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갔으면 함.

=> (이주광 연구관) 현재 등록관리시스템이 없지만, 등록관리 영역, 보존기간 등이 등재될 수 있는 단계로 운영하고자 함. 중앙 부처 기록관 담당자들과 회의한 바로 별도의 단위업무를 부처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라는 업무카드를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세트 식별 내용 등 구체화된 요소들이 확보되면 제안하신 것을 반영한 등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임.

③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2레벨 혹은 3레벨로 세분화시켜 국가기록원과 기관 내부 담당자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크로스 체크도 하면서 좀 더 정교화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이주광 연구관) 현재 정확한 역할 분담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행단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업무 분장과 역할 분담을 중앙부처 담당자 분들과 논의 하고 있음. 향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제안하신 의견을 반영하겠음.

○ (조윤희 (주)한국남동발전)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함.

=> (이주광 연구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식별해서 기록관리 여부를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 지금 어떤 방식이라고 정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현장에서 구분해야 하는 부분임.

향후 기술지원팀의 활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공공지원과와 협의해서 시범모델들은 2~3년 내에 예산한도가 확보되면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음.

○ (우혜린 서울기록원) ①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관 내 관계자의 설득을 위해 법령 사항 및 정보기록보존단 등과 어떻게 다르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방점을 두고 설명해주면 시스템이나 모르는 부분도 더 잘 설득될 수 있을 듯함.

=> (이주광 연구관) 행정정보데이터 관리 관련 규정은 11개로, 행정정보 데이터는 보유 기록이기 때문에 보존이나 평가, 폐기 등은 반드시 기록물 관리법을 따라야 함.

② 실질적인 수행주체로서의 조직과 인력 문제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록관리전문인력 산정 부분은 안 들어가 있음. 일인 기록관체제로는 어려운 일이므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산정기준을 연구해서 내용을 담아주었으면 함. 시스템이나 기술의 발전이 제도보다 빠르므로 제도에는 유연한 내용을 담아주기 바람.

③ 사업 진행할 때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체를 통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음.

=> (이주광 연구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끼리 협의체 방안들을 만들어서 실행하게 되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음.

○ (한상진 육군기록정보단) ① 향후 시범사업 적용 시 전담 조직 협의체가 구성되고, 기록관리항목표를 기준으로 할 것인데 제시한 예시보다 항목표가 세분화되어서 내용 등을 수월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면 함.

=> (이주광 연구관) 기록관리항목표는 영역별로는 실제로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행 샘플뿐만 아니라 매뉴얼 보완 부분까지 포함해서 향후 설명드릴 때 친근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음.

② '19년 7월~12월까지의 향후 계획 중 시범 적용하는 14개 파트는 무엇인지?

=> (이주광 연구관) 인사관리시스템, 전자관보시스템,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등과 같이 중앙부처 14개 시스템의 다양한 유형을 분석할 예정임.

-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①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기록관리대상으로 어떻게 삼을 것이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노력은 사실상 작년 하반기부터 있었음. RM단계에서의 구체적인 기록관리 방안은 시범사업이 끝나야 나오고, 그것을 기록관의 기능으로 시행령에 담아놓는 것도 가능할 것임. 지금의 분석은 2~3개 방식이지만 30개 이상의 유형화 방식도 나올 수 있으며, 그것이 나와야만 유형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RM단계-AM단계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윤곽이 나올 것임. 지금 속도로 가면 3년 이내에 유형별 윤곽은 나오리라 봄.
- ② 현재 운영되는 CAMS 안에 어떤 기능을 추가해서 유의미한 시스템으로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사실 CAMS는 통합시스템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 모듈 방식에 적합한 방식임. CAMS를 어떻게 리디자인 할 것이냐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시스템이 CAMS 덕을 역시 볼 수 없음. 우리는 장기적인 방향과 당장의 현안을 푸는 방향과 전후좌우 선행후행 관계를 따지면서 과도기 대책과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계속 가져 가야되는 상황임.
- ③ 기술지원센터 구성과 관련해서 과장님 이하 3명이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학습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즉각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것을 확산하는 방안까지 찾아야 됨. 그리고 유효인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되는데 시범 프로젝트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 내용을 채울 수 있을 것임. 소요정원 등에 정원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인원을 확보하고 준비된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방식을 찾는 동시에 기록관리항목표 작성 지원 정도는 우리 원 지원부의 담당자들을 학습시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음.

붙임 2

2019년 제4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모습

